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박 상 우	직 급	4급
훈 련 국	영국	훈련기간	2022.9.17.~2024.7.16.
훈련기관	University of York	보고서 매수	109매
훈련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新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제적 재정전략 수립		
보고서 제목	포스트코로나 시대 新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제적 재정전략 수립		
내용요약	<p>I. 서론</p> <p>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인간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복지의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큰 변화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는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4가지 분석을 통해 코로나가 양극화 등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논할 예정이다.</p> <p>우선 첫 번째로는 1990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7년까지의 사회투자의 경향성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이전 시기 전 세계적인 복지투자의 흐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복지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족단위에게 미친 영향을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가족은 인간 사회집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며, 또한 복지 투자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 되는 집단이므로, 코로나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시적인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석은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포함한다. 세 번째 분석은 SDG 1.1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정책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SDG 1.1은 2030년까지 모든 인간사회의 극단적 빈곤을 제거한다는 목표이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 지역적인 빈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빈곤제거를 위한 세계적인 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논할 예정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교정책 분석과 제안이다. 현재 복지제도 중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영역은 연금제도이다. 코로나로 인해 노후빈곤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주요 선진국의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p>		

이러한 네가지 분석과 접근을 통해 거시적으로는 코로나가 양극화 및 빈곤에 미친 영향과 향후 복지투자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과 가족단위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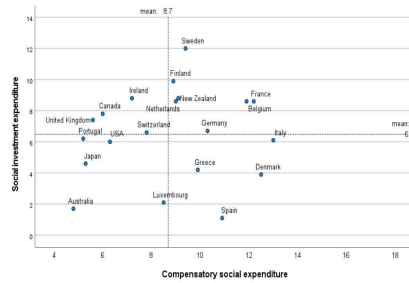
II. 분석 1: 1990년과 2017년까지의 사회투자 패턴과 효과성 분석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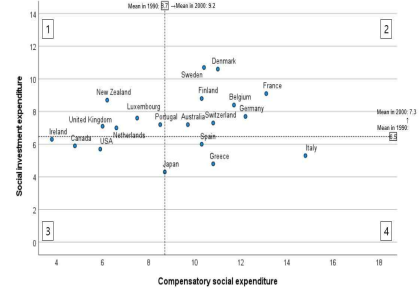
복지국가의 개념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리스크를 어떠한 방식으로 완화하고, 또한 국가가 복지에 대한 공공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발전해왔다. 이 챕터에서는 OECD 국가들의 사회투자가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 유형 내에서도 복지투자의 방향이 수렴했는지에 대한 양적분석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복지투자의 투입과 산출간 관계분석을 통해 복지투자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2. 1990년~2017년까지의 사회투자 패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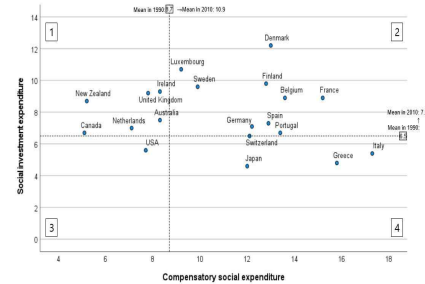
(1) 1990년 사회투자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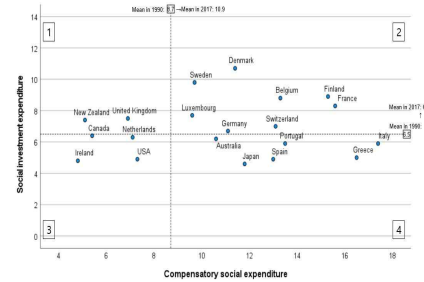
(2) 2000년 사회투자 패턴



(3) 2010년 사회투자 패턴



(4) 2017년 사회투자 패턴



분석대상 20개국의 평균 사회투자 지출은 1990년 6.5%에서 2010년 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뒤 2017년에 다시 6.9%로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사회투자 지출의 변동계수는 1990년의 0.43에서 2017년의 0.25로 감소하였으며, 국가간의 수렴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일 기간 동안 모든 국가의 보상적 사회 지출을 살펴보면, 이는 1990년의 8.7%에서 2017년의 10.9%로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일기간 동안 보상적 사회 지출의 변동 계수는 1990년의 0.29에서 2010년의 0.35로 감소하였으며, 국가간 수렴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회 투자 지출과 보상적 사회 지출 간의 격차는 1990년의 2.2%p에서 2017년의 4.0%p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상적 사회 지출이 국가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국가가 사회 투자 지출보다는 보상적 사회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사회투자 지출의 그룹 평균과 보상적 사회지출의 그룹 평균이 매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관련 연구에서 분석된 것과 같이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antos and Simoes, 2021; Normann, Ronning and Norgaard, 2009; Andersen, Schoyen and Hvinden, 2017). 사회 투자 지출의 그룹 평균은 1990년의 8.6%에서 2000년의 10.5%로 계속 증가한 뒤 2017년에 9.8%로 둔화되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1990년의 3.9%에서 2017년의 10.7%로 사회 투자 지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보상적 사회 지출의 그룹 평균은 1990년의 10.3%에서 2017년의 12.1%로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일 기간 동안 보상적 사회 지출의 변동 계수는 1990년의 0.15에서 2017년의 0.19로 증가하여 국가간의 수렴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수주의 국가의 경우, 사회 투자 지출의 그룹 평균과 보상적 사회 지출의 그룹 평균이 모두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투자 지출의 그룹 평균은 1990년의 6.5%에서 2017년의 7.0%으로 증가하였으며, 변동 계수는 1990년의 0.35에서 2017년의 0.18로 감소하여 보수주의 국가들의 수렴이 나타났다. 보상적 사회 지출의 그룹 평균도 1990년의 9.3%에서 2017년의 11.7%로 증가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변동 계수도 감소하여 보수주의 국가들 간의 수렴이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0년의 5.3%에서 2017년의 11.8%로 보상적 사회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 관련 연구에서 분석된 것과 같이 자유주의 국가들의 사회 투자 지출의 그룹 평균은 전체 평균 지출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Garritzmann, Hausermann, and Palie, 2022; Bakker and Vliet, 2021). 자유주의 국가들의 사회 투자 지출의 그룹 평균은 1990년의 6.8%에서 2017년의 6.2%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국가별로는 호주의 사회 투자 지출이 1990년의 1.7%에서 2017년의 6.2%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자유주의 국가들의 보상적 사회 지출의 그룹 평균은 1990년의 6.5%, 2000년의 6.1%, 2010년의 7.1%, 2017년의 6.7%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호주, 영국, 미국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보상적 사회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보상적 사회 지출이 감소하는 등 각 국가마다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남부 유럽 국가의 경우, 사회 투자 지출의 그룹 평균은 1990년

의 4.4%에서 2017년의 5.4%로 계속 증가하였지만, 항상 모든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변동 계수도 1990년의 0.47에서 2017년의 0.09로 감소하여 국가간의 수렴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은 1990년의 1.1%에서 2017년의 4.9%로 사회 투자 지출이 네 배 이상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보상적 사회 지출은 그룹 평균이 1990년의 9.7%에서 2017년의 15.1%로 증가하였으며, 항상 전체 평균을 초과하였다. 또한, 변동 계수도 1990년의 0.29에서 2017년의 0.12로 감소하여 국가간의 수렴이 확인되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모두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보상적 사회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 투자 지출은 자유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복지 체제 그룹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일 기간 동안 보상적 사회 지출의 증가가 사회 투자 지출의 증가보다 높은 것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3. 소결

결과적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20개의 OECD 국가가 사회 투자 지출을 평균적으로 증가시켰지만, 2017년에는 사회 투자 지출이 감소하여 트렌드가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에, 보상적 사회 지출의 증가가 사회 투자 증가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흐름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복지 체제 그룹별로 확인해 본 결과,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사회 투자를 가장 크게 증가시켰으며, 남부 유럽 국가와 보수주의 국가가 이를 이어 따랐다.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 사회 투자가 1990년에 비해 2017년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복지 체제별로 사회 투자의 흐름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III. 분석 2: 코로나 팬데믹이 가족에 미친 영향 (Scoping study)

1. 배경 및 방법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격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에게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시행하여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격리 및 봉쇄와 같은 급변적인 조치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개입은 질병 전파를 일부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구현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인간 사회의 측면에서 지진 같은 충격을 일으켰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인간 사회의 중요한 중심 축인 가족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이에 따른 대응 조치로부터 비롯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직접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붕괴로 인한 실업이라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직접적 결과로 인해 가족들은 잠재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동시에 재택근무로 인해 가정 환경 내에서 전통적인 보육 책임과 직장 업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는 성별에 기반한 노동 분담의 불균형을 발생시켰다. 또한 사회적 격리는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발달, 가정 내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가족의 구조 내에서 복잡하고 다면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챗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복지의 기본단위인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을 분석하기 위해 스코핑 리뷰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Arksey와 O'Malley(2005)가 제안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랐으며, (1) 연구 질문 식별, (2) 관련 연구 식별, (3) 연구 선택, (4) 데이터 정리, (5) 결과 집계, 요약 및 보고의 다섯 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되었다.

2. Scoping study 결과

스코핑 리뷰결과, 총 593개의 관련 연구 중 59개의 핵심연구를 추릴 수 있었고, 그 중 10개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선정된 10개의 연구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는 ①성별에 기반한 불평등 발생, ②정신건강 영향, ③재정적 어려움, ④직업과 가정생활간의 갈등으로 나뉜다.

첫 번째 중요한 범주는 가족 내에서의 성별에 기반한 불평등의 발생이다. Gragam et al.의 연구(2021)는 오스트리아 가족을 조사하여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사 일과 학교 폐쇄로 인한 원격 교육, 보육 시설 폐쇄로 인한 책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고통이 남성과 대조적임을 밝혔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강화되어, 남성보다 더 많은 부담을 떠안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Elhinnawy et al.의 연구(2023) 역시 영국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전통적인 가사 일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된 보육과 교육 부담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사분담이 양성평등하게 이루어진 가족 사례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봉쇄 조치 기간 동안 가족의 결속력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발견된 점이다.

두 번째 범주는 코로나가 가족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Feinberg et al.의 연구(2022)는 미국에서 전염병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아이들의 외상적 반응과 내성화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밝혔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공동 육아에서의 갈등이 있는 가족에서는 부모의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났다. Marzilli et al.의 연구(2021)는 코로나로 인한 이탈리아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그들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즉, 코로나로 인한 외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부모는 자녀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요르단 가족을 조사한 Al Gharaibeh et al.의 연구(2022)는 사

회적 격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 수면 장애 및 가정 내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Larsen et al.의 연구(2022)는 어린이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로,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어린이의 신체적 및 인지적 반응 문제를 밝혔다.

세 번째 범주는 가족 내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O'Connor et al.의 연구(2022)는 호주 가족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 응답자의 1/3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 연구는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과 같은 가족 내 사회 경제적 요인과 경제적 충격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Steiber et al.(2022)은 정부 보조금과 단기적 직업 제공에도 불구하고 호주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임금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범주는 직업과 가족 생활 간의 전반적인 갈등에 대한 것으로, 주로 원격 근무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Barriga Medina et al.의 연구(2021)는 에콰도르 가족을 분석하여 COVID-19로 인한 원격 근무가 높은 수준의 직업-가정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밝혔다. Mazzucchelli 등(2020)은 이탈리아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원격 근무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중요한 보육 부담을 겪고 있어 직업-가정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3. 소결

결론적으로, 스코핑 연구를 통해 코로나가 가족에게 재정적 어려움, 정신 건강 문제 및 성별 불평등 등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복지투자 및 복지정책 입안과정에서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가족들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에 이러한 영향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IV. 분석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빈곤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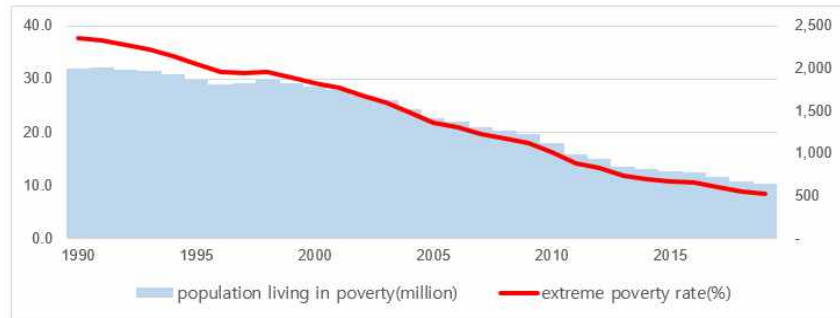
1. 배경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사회 및 문화를 포함한 인간 사회의 모든 부문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질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Menon, 2020).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생계비 급등은 저소득층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극심한 빈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 SDG 목표 1.1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챕터에서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빈곤을 추이를 검토하고,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의 영향을 반영하여 2020년 이후의 빈곤율을 더 분석한다. 또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의 효과와 장단점을 분석하고, 2030년에 SDG 목표 1.1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코로나의 영향을 감안한 빈곤율 추이 분석결과

(1) 코로나 이전까지의 빈곤율 추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빈곤율과 빈곤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세계 빈곤율은 1990년 37.8%에서 2008년에 절반인 18.8%로 감소하고, 2019년에는 8.4%로 급격히 낮아졌다. 빈곤층 인구도 1990년에 1,996억 명에서 2019년까지 648억 명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빈곤율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Holden, 2014). 더불어, 싱가포르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높은 교육 투자로 인한 경제성장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빈곤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Awan et al., 2011).

(2) 코로나 영향을 감안한 빈곤율 변동



최근 세계은행(2020, 2022)은 COVID-19 발생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빈곤율을 재추계하였다. 코로나 발생 전 2020년의 빈곤율은 2019년의 8.4%보다 낮은 8.1%로 예상되었지만, COVID-19을 반영한 새로운 2020년 빈곤율 예측은 9.3%로,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약 9천만 명의 사람들이 COVID-19 발생으로 절대 빈곤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1년과 2022년의 현재 빈곤율 예측도 이전 예측보다 높았다. 당초 2021년 빈곤율이 7.8%, 2022년 7.5%로 예상되었지만, 생계비 상승으로 인해 빈곤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8.8%, 2022년 8.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COVID-19 및 생계비 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피해가 빈곤율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책제안

우선, 단기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재원을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현금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이 어느정도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현금지원을 점차 줄이고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생계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핀포인트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빈곤국의 부채 해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정책이 시급하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빈곤국의 부채 수준이 급등한 만큼, HIPCs 이니셔티브, DSSI 같은 기존의 국제적 협력 틀을 활용하여 빈곤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대응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장기적 대응은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이전과 안전망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교육 정책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이다. 그리고 이주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간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 비대칭일 수 있으므로 인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이주 정책은 이주 후 고용 유지, 생활 환경, 이주민에 대한 복지 정책 등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V. 분석 4: 연금제도 개혁과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제안

1. 배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연금의 영역이다. 연금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도 문제지만, 고령화에 따라 향후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다단계 소득 보장 시스템과 함께 공공 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발전해왔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공공 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연금 개혁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95년에는 시골 지역 및 1999년에

는 도시 지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6년에는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사실상 전 인구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발표된 한국 정부의 재정 추정에 따르면, 한국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로 인해 2041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보건복지부, 2023년).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로 인한 공공 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경험한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정책 이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비교정책 분석 및 정책제안

핀란드, 일본, 미국, 독일의 연금제도 개혁 사례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노후소득 보장, 국민적 공감대 측면에서 평가,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주요 정책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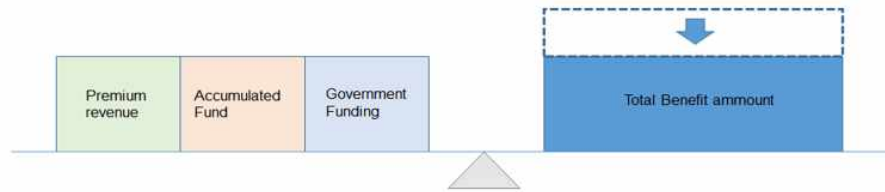
핀란드의 연금 개혁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 연금 수혜액을 평균 수명에 연결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국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핀란드와 같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증가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즉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핀란드의 연금 수혜 시작 연령을 미래의 평균 수명에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 역시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 정책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은퇴 연령의 연장과 그 결과로 노인의 근로 소득 증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혁 정책을 살펴보면, 공공 연금을 개혁할 때 매개변수 및 구조적 개혁이 모두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은 기본적으로 매개변수 개혁을 계속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83년 개혁에서 사회보장 세율을 5.4%에서 5.7%로 인상하고 조기 은퇴 연금(62세)을 최대 연금의 80%에서 70%로 줄이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매개변수 개혁을 진행했다. 공공연금 개혁은 기본적으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매개변수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경우 프리미엄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미국의 사적 연금 활성화 정책은 공공 연금에서 사적 연금으로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했다.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 국가인 미국은 개인의 자유 선택에 따라 사적 연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적연금 상품 다양화,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공공연금 개혁으로 인한 은퇴 소득의 약화 보상을 위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연금 개혁을 살펴보면 2004년 개혁 과정에서 거시적 슬라이드 장치를 도입했다. 거시적 슬라이드 장치는 미래에 노령화로 인한 보험료가 감소할 때 자동으로 연금 수혜액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이전에는 보험료와 지출 간의

차이를 매년 매개변수 개혁을 통해 보정해야 했지만, 거시적 슬라이드의 도입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개혁 없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8년과 2007년에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연금 매개변수 개혁에 대한 논쟁이 매 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슬라이드 장치의 도입은 반복적인 정치적 논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 거시경제슬라이드의 원리



독일의 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개혁에서 Rürup 위원회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Rürup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 지역주민 및 사립 연금 회사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현실적 대안들이 이러한 다양한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었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향후 한국에서도 사회 각 계층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코로나의 영향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인간사회의 전반에 복잡다기하게 미친만큼, 그 대응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정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총 4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세계 복지투자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향후 복지투자의 기본방향을 고민해보았고, 이어 코로나가 거시적으로는 빈곤, 미시적으로는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거시적, 미시적 복지재정 정책을 모색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뤘다.

첫째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0개의 OECD 국가에서 사회투자의 전반적인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0년부터 2000년까지 20개 국가 모두에서 사회투자가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분석기간 동안 보상적 사회 지출이 사회투자를 초과하는 특징도 확인하였다. Welfare regime group별로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사회투자 증가를 주도하였고, 남유럽 국가와 보수적 국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자유주의 국가는 2017년에 1990년 대비 사회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투자가 증가했지만, 복지 체제 그룹을 기반으로 분석할 때는 그룹별로 각기

다른 패턴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선 어떠한 welfare regime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분석은 코로나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스코핑 스터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593건의 관련 연구 중 가장 관련성 높은 10가지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은 크게 네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가족내 성별에 기반한 불평등의 발생, 정신 건강 문제, 취약 가족의 금전적 어려움 악화, 원격 근무로 인한 직업-가족 갈등 증가이다. 가족은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단위라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의 재정부담 완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정책 등이 시급할 것이다.

세 번째 분석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감안한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 세계적 빈곤 추이에 초점을 맞췄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은 2019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지만, 코로나 이후의 추정치는 오히려 빈곤수준이 악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재원을 활용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빈곤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업료 면제 및 보조금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빈곤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등 구조적인 대응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 분석에서는 코로나 이후 가장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핀란드, 일본, 독일 등의 연금제도 개혁 사례 중 우리나라의 상황에 policy transfer할 수 있는 요소를 짚어보았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가능한 주요 개혁방안에는 기대 수명을 기반으로 한 자동 조정장치, 거시경제변동 요소의 도입, 미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상한선 설정 등이 있었으며, 또한 개혁이후의 노후소득 보안을 위한 사적 연금의 활성화 정책도 향후 정책입안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